

Hot Issue & Cool Vision

2004/11/09

부시 재선 이후 북핵문제 전망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차례

1. 부시 재선의 의미
2. 부시 2기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3. 북한의 대응
4. 정책적 시사점

내용 문의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e-mail kifs@kifs.org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연구원

부시 재선 이후 북핵문제 전망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 부시 재선의 의미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미대통령 선거가 결국 부시의 재선으로 결론이 났다. 한 국가의 대선에 이처럼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이번 행사가 단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세계질서 및 국제정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이었다. 국내정치 현안이나 경제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쟁을 벌였던 과거 대선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의 대외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쟁점이 첨예하게 맞붙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맥락에서 도출되기 마련인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의 방향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

우선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라는 선거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선거 이전부터 적잖은 사람들이 초박빙을 점치면서 케리의 당선가능성마저 조심스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작 결과는 부시의 낙승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00년 선거 때보다 높은 득표율과 잡음 없는 선거 확정으로 부시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대선 결과가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인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변화의 복판에는 바로 2001년 9.11 테러가 있었다. 탈냉전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았던 미국의 본토에 그것도 도시 심장부에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감행되고 이로 인해 수천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탈냉전 시대와 구별되는 또 한번의 변화를 강제했다. 테러를 근절하고 테러리스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안보의 과제로 여겨졌고 이른바 ‘탈탈냉전 시대’(post-post-cold war)로 규정되는 ‘반테러 전쟁의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미국인의 합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경제를 주 이슈로 내세우고 부시 대통령의 반테러 전쟁의 일방주의를 비판했던 케리 후보는 이미 변화한 미국인의 의식을 감안할 때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반테러와 WMD 확산방지를 내세운 안보 이슈의 선점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던 안보 사령관 부시 대통령은 따라서 미국 유권자들의 안전 희구 심리와 반테러를 위한 일방주의 수용이라는 분위기 속에 4년 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2. 부시 2기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부시 재집권 이후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유연성보다는 강경함을, 국제협조보다는 일방주의를 더욱 힘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9.11 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인의 안보 불안감을 토대로 얻어낸 대선승리인 만큼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보다 확고한 반테러 전쟁 수행과 WMD 반확산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 부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 나타난 미국 사회의 치유할 수 없는 분열 현상을 봉합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사회통합적 의지를 보일 것이고 이에 따라 대외정책에서도 보다 유연한 모습의 스타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은 따라서 별로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된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은 이제 3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반테러 전쟁과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미국인들로부터 확인받은 만큼 대외정책에서의 일관성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9.11 이후 반테러 전쟁과 WMD 반확산이라는 외교안보정책의 일차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보여주는 대외정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은 일방주의적(unilateralism) 경향이다. 반테러 전쟁과 WMD 확산방지를 위한 미국의 방침에 국제기구나 우방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적 협조보다는 일방주의적 대외관계를 밀어부칠 것이다. 여기에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나 북핵해법 내용 역시 부시 행정부의 총론과 다르다면 한국정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한국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하거나 제각각 마이웨이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또 하나는 전쟁방지와 갈등해소를 위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에 치중하기보다는 테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할 경우 미국은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까지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슈퍼파워로서의 미국이 외교보다는 군사적 수단과 강제적 조치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이미 국제질서에서 지난 시기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실제로 가시화되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혹은 아예 처음부터 외교적 해결보다 강압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큰 고민 없이 곧바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테러와 WMD 반확산의 과정에서 일방주의적 경향과 군사적 수단 선호의 경향이 부시 행정부의 특징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같은 특징들이 향후 4년의 재집권기간 동안 더욱 일관되게 혹은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이는 곧 북핵문제의 해법에서도 대화와 협상보다는 대결과 강압의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부터 이른바 '대화과 압박'이라는 두개의 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해왔다. 북한의 선택포기를 일관되게 요구하면서 납득할 만한 양보조치가 없을 경우 각종 제재를 포함해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임은 오래전부터 공언해왔던 바이다. 그러나 '대화과 압박의 병행카드'는 사실상 협상을 위한 노력보다 압박으로 나아가는 수순으로서 대화에 머문 경향이 농후했다. 어렵게 마련된 6자회담의 대화틀 역시 사실은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간 '협상'의 장이었다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회담장'이었을 뿐이다. 3차례의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양보와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의 선택포기와 리비아식 모델 수용을 요구했을 뿐이었다. 대화는 존재했지만 협상은

애초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6자회담이었던 셈이다.

대북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조치'(PSI)를 가동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해상봉쇄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이미 1차 6자회담에서부터 핵무기 외에 미사일과 마약 테러 및 인권 등 다양한 아젠다를 꺼내서 북한을 압박했다. 6자회담의 무용론이 확산될 경우 언제라도 핵문제를 UN 안보리에 상정할 것임을 공언했고 최근에 와서는 탈북자 대량 양산을 통해 대북 압박을 꺾하는 '북한인권법'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선양보를 요구하는 6자회담의 대화틀과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각종의 대북 압박조치를 병행했던 셈이고 이는 한 손에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대화'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압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은 지금과 같은 병행전략을 그대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대화 대신 압박을 조기에 선택할 가능성이 1기 때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1기 때 추진했던 대화 조치도 실상은 북한의 선택포기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대화였지 북미간 상호 양보를 통한 협상의 의지는 결여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반테러와 WMD 반확산이라는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재확인 받은 이상 보다 공격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 2기 부시 행정부는 더욱 공세적인 북핵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여전히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은 '악의 축' 국가이고 테러리스트에게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은 나라이며, 최고지도자 김정일은 독재자이며 폭군이자 반인권적인 무법자로 인식되고 있다. 테러를 근절하고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이전을 극력 저지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을 보건대 분명 북한의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1기 반테러 전쟁의 수행과정이 이미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제 남은 악의 축 국가인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가 당면한 해결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

재집권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공세적이고 강경한 기조로 진행될 것임은 또한 2기 행정부의 인사교체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부시 행정부에서 그나마 상대적 온건인사로 분류되었던 파월 국무장관과 아미티지 국무부장관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데다 오히려 그 후임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방라인과 안보회의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강경파의 대부로 자리잡고 있는 체니 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되었고 이른바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국방부 라인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것이 점쳐지는 상황 역시 향후 북핵문제가 대화보다 압박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케 한다.

결국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해법이 압박을 중시하는 강경기조로 흐를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일단 초기에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미 대선 직전 한국을 방문한 파월 국무장관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약속했고 부시로서도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대화의 마지막

제스처로서 6자회담의 유용성은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6자회담 재개를 시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4차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대외적으로 6자회담의 무용론을 확산하면서 북핵해결을 위한 압박카드의 불가피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순서에 따라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수차례 연습한 바 있는 PSI를 직접 가동하여 구체적 압박 조치를 시도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핵문제 논의를 통해 북한 압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토대하여 탈북자 문제를 전면화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압박도 새로운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3. 북한의 대응

대선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이 가시화될 것임은 이미 자명해 보인다. 따라서 2005년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변화를 희망해볼 수밖에 없다. 이미 4차 6자회담을 무산시키면서 케리 후보의 당선에 ‘올인’했던 북한으로서는 이번 대선 결과가 최악의 상황임에 분명하다. 북핵위기 발생 이후 일관되게 북미간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단계별 동시행동 조치를 요구했던 북한으로서는 이제 동결 대 상응조치라는 1단계 동시행동마저도 미국에게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선택폐기 요구가 수정될 가능성보다는 북한의 굴복이 없을 경우 대북압박의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 외에 별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우선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 4년이 북한이 겪기에는 긴 시간이고 부시 대통령의 반테러와 WMD 반확산 의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결국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재개될 6자회담에 나와 미국의 선택포기 요구에 부응하면서 CVID에 입각한 공식적 핵폐기 선언을 할 경우 북핵문제는 미국의 뜻대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과연 그렇게 나올 것인가이다.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거래’의 방식을 통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행동이라는 ‘맞교환’의 거래방식은 이제 부시의 재집권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면 맞교환이 아닌 ‘외상거래’의 방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바, 이는 북한이 먼저 핵폐기 방침을 선언하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후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거래방식에 북한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건을 인수한 미국이 반드시 사후에 북한에게 댓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 외상거래를 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신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의 북미간 갈등에서 과연 북한이 외상거래를 할 만한 대미 신뢰를 확신하고 있는 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핵카드를 통해 북한체제를 압살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크고 더욱이 인권카드까지 동원하여

정권교체마저 의도한다는 불신이 팽배해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미국의 선택포기 요구를 선택 수용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북한이 선택포기라는 외상거래 방식을 받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지는 미국과의 극한대결 밖에 없다. 어차피 미국의 의도가 자신의 체제를 변경하거나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이라면 북한으로서 미국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막판 협상에 나오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재연인 셈이다. 미국이 강하게 나올수록 북한도 더 강하게 대응함으로써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다면 미국이 결국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경조치보다는 오히려 위기해소를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막판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이 판단에는 적어도 미국이 대북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이는 한반도의 역학구조상 노무현 정부와 중국의 반대 등 주변국들의 만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판단은 만의 하나라도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면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도 된다는 부도덕함마저 엿보게 한다. 그리고 북한의 초강경 대응에 대해 미국이 곧바로 군사적 조치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고 PSI 가동과 북한 선박의 해상봉쇄 및 나포 작전 등 군사공격 이전의 압박조치를 시도할 경우,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북한이 1994년 위기고조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경험에 근거하여 이번에도 또 한번 미국과의 전면대결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대하고 있는 미국은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9.11 이후 부시 2기의 공화당 정부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최근 공화당 정부 관계자의 말을 통해 미국의 레드라인이 북한의 핵보유가 아니라 '핵물질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보도가 있음을 보면 설사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보유 선언 등 기존의 레드라인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벼랑끝 전술로 통할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미국은 자신의 군사적 조치의 정당성을 위해 북한의 핵물질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나 선박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며 이 때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가능성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대응에 달려 있게 된다. 결국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의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는 기존의 시도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부시 2기의 대북 강경방침에 대해 일단 선택포기라는 굴복보다는 막판 긴장고조를 위한 초강경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선은 미국이 추진하는 4차 6자회담에는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회담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 포기, 동결에 따른 상응 조치 제공, 남한 핵문제 우선 논의 등이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선 이후 미국의 반응을 살피고 향후 북한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회담장에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앞으로도 당분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전면대결을 준비하는 터에 남북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위기의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긴 하다. 그러나 대선 이후 북미간 강경대응이 진행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예전부터 주장했던 이른바 ‘남북민족 대 미국’이라는 대결구도를 강조하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 택일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유지가 아닌 경색국면이 남한의 선택을 압박하는 데 보다 유용하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대북 압박과 봉쇄를 선호하는 부시 행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한국 정부의 의견불일치는 오히려 남북관계 유지 때보다 경색의 국면이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경우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강경대응을 막게 된다는 점에서 북으로서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안타까운 전망이지만 미국 대선 이후 2005년 한반도 안보 기상도는 매우 흐릴 수밖에 없다. 선악의 이분법에 익숙한 부시 행정부의 도덕적 우월주의가 대선 승리를 계기로 대외적 일방주의와 군사적 조치의 선호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부시식’ 대로 풀어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실리를 선택하기 보다는 포기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이 주장해 놓은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자기 뜻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북핵문제는 ‘북한식’의 벼랑끝 전술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위기는 심화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가 도래한다고 해서 해법이 없다고 아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더욱더 없다.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이자 사태악화의 경우 일차적 피해자인 한국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선은 북미간 극단적 대결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고 설사 위기국면으로 나아간다면 하더라도 ‘관리가능한 위기’(manageable crisis) 국면에서 북미양자가 상호 양보를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언제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간 신뢰회복을 전제로 미국의 대북강경 조치를 일단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11월 20일에 열리는 칠레 산티아고에서의 APEC 정상회담 중 개최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부시의 재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만나 집권 2기 대북정책과 북핵해법을 논의하고 최소한 평화적 해결 원칙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정도의 합의라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초강경 대응도 적절히 막아내야 한다. 부시의 재집권 상황에서 북한의 초강경 대응이 실제로 북한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북한의 양보가 오히려 미국의 강경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음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 설득작업은 지금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소강국면을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함을 전제로 한다. 미국의 강경방침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북한마저 맞대응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

는 장담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대북 설득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도 이런 맥락에서 적극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 실패하고 결국 첨예한 긴장고조 국면으로 향할 경우 한국정부는 군사적 조치를 동반하는 대북 압박에는 절대 반대하면서 북미 모두 윈윈의 방식으로 한발씩 양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 위기상황이 남북미가 통제불가능한 수준까지 고조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일단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위기는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지혜를 모아 북미간 정면충돌을 방지하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2004년 11월 9일 미래전략연구원>